

尹 탄핵안 가결... 도내 지자체장 등 “도민의 승리”

김관영 도지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상화시켜야”
전북 시장군수들, “민주주의 승리 위해 다시 시작할 것”
도의회, “종결이 아닌 시작”... 내란 수괴 체포 등 촉구
시군의회의장들, “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한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되자 도내 지자체장과 정치권은 도민들의 승리라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으로 민주헌정 질서를 위협했지만, 국민과 국회는 계엄 해제, 탄핵 가결로 민주헌정의 질서를 지켜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 바로 우리 국민이 보여준 것으로, 국민과 국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 가결 후 우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과거를 청산하고, 과도기 국면에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학혁명의 DNA가 새겨진 민주주의의 심장, 전북의 자부심을 새겨며 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북 시장군수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 보여줘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8년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들은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국민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며, 국민의힘은 내란의 부역자로서 정당이 해산될 것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직을 잃고 내란 부역자의 처벌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가담세력이며 동조세력이며 부역자며,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그 속에서 기생하는 국회의원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자치도의회 “탄핵은 종결이 아닌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성명서를 통

해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환영한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과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해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도민들은 윤석열의 무능함과 무도함, 끝내 내란으로 치달은 학정을 제일 선두에서 경고하고 폭로하며 싸워왔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탄핵 정국’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국헌 회복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 가담자 즉각 체포 △윤석열 일당이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 수사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 등 억울한 국민의 희생에 대한 즉각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들 “비상계엄 사태 수습 위한 첫걸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가담자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위대한 우리 국민,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승리”라며 감사 인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민생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민생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김재훈 기자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가 손글씨 메시지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순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4년도 추경 등 심의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3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호)는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86억원으로, 손종석 의장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민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 투명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군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신정호 의원은 ‘순창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문화 거리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순창만의 독자적인 음식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尹 탄핵하라”... 도내 기초단체장들 1인 시위

지난 14일 전주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도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전북자치도내 기초단체장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13일) 우법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서신동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출근하는 시민을 상대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반대는 내란공범!’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출근 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우 시장은 오가는 차량과 시민을 상대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우 시장은 이어 시청 회의실에 걸린 국정운영 기조 액자를 직접 철

거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 탄핵을 향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주 김제시장도 13일 출근 시간에 맞춰 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으며, 유희태 완주군수도 완주 관내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최훈식 장수군수도 이날 장수읍 로터리에서 탄핵 촉구 1인시위를 벌였으며, 전날 정현을 익산시장도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도 이날 퇴근시간

대에 맞춰 순창터미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 오전,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조규철·임정호·차남준·이경신·박성만 고창군의원과 일부 군민들도 심 군수와 함께 시위에 동참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한편, 도내 기초단체장들은 재포결 당일, 전주객사 풍매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날 국회 재포결에서 300표 중 찬성표 204표를 얻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불씨 지피자”

尹 퇴진 요구 공동선언문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교 학생들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피자”고 주장했다.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 소속이정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즉시 탄핵을 의결하라”, “국민의힘은 12월 7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투표를 불성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결에 참여하라”,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내란 수괴 및 동조세력을 단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 땅의 대학생들은 항상 정



전북 대학생 비상시국회의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의와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고 역사의 최전선에서 싸워왔다”며, “지금 또한 다르지 않다”고 하며, “우리는 그 역사를 계승하여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생희정은 “자유와 민주주의는 너무나 당연했기에 그 소중함을 경시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된다”며, “훗날 가르칠 아이들에게 물려받은 것들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낸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 교육활동 전념”

서거석 교육감,尹 탄핵안 가결에 “정신적 학사운영 매진”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정신적 학사운영 매진”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국정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일련의 사태에 흔들리지 않고 차질 없는 학사운영 추

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 교육감은 “본청은 물론 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 교직원 모두 학교 안전에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불필요한 행사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 모두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안전대응반을 가동했다. /장문성 기자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과정 주민참여 의무화”

윤수봉 도의원, 송전선로 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이 지난 13일, 도의회 제415회 정례회(4차)에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에서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배전망을 지중화하라”고 건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감동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자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반도체”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를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 전환하여 산업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무주=전문성 기자